

토론문

“한반도평화경제의 필요성과 신남북경협”과 “신한반도체제와
신북방협력방안” 발제에 대한 의견

양 갑 용 연구위원
(국가안보전략연구원)

□ 권영경은 기능주의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독일과 다른 두 가지 특징으로 △정전체제 △냉전체제의 비대칭 구조를 제시

- 남북 내부 간 교류협력이 국제 변수의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설명
-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전략은 남북 내부협력과 함께 국제변수의 영향을 줄이는 두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
- 지금 추진하고 있는 ‘한반도평화경제전략’ 구상이 바로 국제변수를 줄여주는 접근 방법인지?
- 국제환경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체하거나 변화시키는 방안으로 이슈, 국면, 구조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찾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됨
- 현재 남북 소원 국면이나 북미 접근 약화 국면에서 국면 변화를 이끌 이슈는 무엇인지?
- 그리고 이러한 국면 전환이 최종적으로 정전체제와 냉전적 비대칭 구조를 흔들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이슈를 통해서 국면 전환, 구조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지 발제자의 의견은?

□ 권영경은 한반도 평화경제전략 추진 배경으로 △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신냉전 질서 재편 가능성 △세계화의 퇴조 △인간안보 문제 증가 등을 제시하고 있음

- 그 방향으로 △평화-경제개발-평화 연계 전략 △대륙-해양 연계 물류망(도로, 철도 연결) 구축 △한반도 전체를 글로벌 기업의 GVC에 포함 △인간안보 차원의 한반도 산남북 개발협력 추진 등을 제시
- 이러한 접근 방향이 모두(冒頭)에서 비판한 이른바 기능주의적 접근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
- 이러한 방향성에 동의하더라도 국제변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전략과 접근이 필요해 보임
-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‘신경제구상’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‘한반도 평화프로세스’로 인해서 덜 주목받거나 심지어 사실상 폐지되었는지?

□ 윤승현은 신한반도체제를 평화경제를 동력으로 삼아 한반도의 평화협력공동체와 경제협력공동체를 형성하고 동아시아 협력 구도로 확장해서 △분단체제 해소 △동아시아 경제협력 확대 △역내 신안보질서 형성 견인을 기대하고 종국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고 설명

- 이 과정에서 평화가 먼저인지 경제가 먼저인지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, 발제자의 의견은?
- ‘동아시아 공동체’ 개념에 대한 충분한 추가 설명이 요구됨(세계화 추세가 퇴조하고 보호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는 어떤 그림인지?)
- 결국 신한반도체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구한반도체제와 차별성이 어디에 있고, 왜 신한반도체제로 가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부연 설명할 필요

□ 신한반도체제와 북방경제협력의 연계성을 논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. 게다가 3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한반도체제와 신북방협력방안에서 신북방협력의 개념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

- 기존 접근과 다른 방식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채워지는지 혹은 채워져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함(당위성과 함께 구체성 보완)
- 실험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는 GTI에 우리가 참가해야 하는 이유와 특히 국가 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음
- 이 과정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셨는데, 정책 지속성 차원에서 고민이 있을 것 같은 생각

□ 정책 고려 사항

1) 정책 지속성 담보 문제

- 권영경, 윤승현의 발제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과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데 모두 의미 있는 제언인바, 이러한 고견이 정권 교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정된 제도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함
- 예컨대 북방협력 관련된 사업 추진 동력의 약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환경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성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
- 일종의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대타협이 필요하고 법적인 지원도 필요함

2) 당위성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

-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협력, 국제 협력의 당위성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고 어느 정도 역내 국가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
- 관건은 이러한 협력 국면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갈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함
- 사건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하고, 국면 전환을 통해서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이벤트가 필요하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자리매김해야 함(행동으로 규범을 만들어가고 표준을 설정해 나가야 하고,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)